
193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 논쟁에서 제시된 뫼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신정완**

스웨덴은 20세기에 들어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를 경험하였는데 이를 배경으로 인구문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우려한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진보주의자들은 신멜더스주의적 사고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뫼르달 부부(Alva & Gunnar Myrdal)는 1934년에 『인구문제에서의 위기』라는 책을 발간하여 인구문제 논쟁의 지형을 바꾸어놓았다. 그들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진보적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의 큰 부분을 사회가 부담하고, 기혼 취업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운영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뫼르달 부부가 자신들의 정책 구상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제이론의 측면에서는 현대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 ‘소비자 무지’, ‘인적자본이론’, ‘외부성의 내부화’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기초로는 가치 지향 차원에서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연성 민족주의,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경북대학교 신입교수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공리주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접근법 차원에서는 강한 이성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뮌르달 부부의 철학적 입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공학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뮌르달 부부의 접근법은 비판의 여지가 많으나, 당시 스웨덴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뮌르달 부부의 공로를 크게 인정할 수 있다. 뮌르달 부부는 인구문제 논쟁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런 의도는 대체로 실현되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큰 부분이 뮌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뮌르달 부부, 인구문제 논쟁, 가족정책, 공리주의, 이성주의

1. 들어가는 말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사회문제의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 노동인력 부족, 내수시장 축소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 고령화 요인의 다수는 긍정적 사회발전을 반영한다. 의료기술의 발전, 영양 개선, 건강보험제도의 순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동전의 양면이 저출산인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 긍정적 사회발전의 자연스런 효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과중한 교육비와 주거비, 양질의 보육시설의 부족, 기혼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의 미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청년층의 비관적 전망 등이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의 핵심 요인들인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역대 정부들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해왔다. 보육비 지원, 공공 보육기관 증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왔으나 아직 출산율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공략하려면 재원 투입 규모도 충분해야 하고 정책적 접근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모범적 복지국가의 대표사례인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스웨덴도 20세기 초에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1930년대에 ‘인구문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 성향의 지식인인 뮈르달 부부(Alva & Gunnar Myrdal)였다. 당시 소장 경제학자이자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 1898-1987)과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인 그 부인 알바 뮈르달(Alva Myrdal; 1902-1986)은 1934년에 『인구문제에서의 위기(Kris i befolkningsfrågan)』라는 저서를 공동으로 집필, 발간하여 인구문제 논쟁에 개입했다.¹⁾

이 책에서 뮈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비의 큰 부분을 사회가 부담해야 하며 기혼 취업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운동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저출산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종합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족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뮈르달 부부의 정책 제안 중 많은 것이 당시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1930년대 말부터 다양한 가족정책 프로그램이 속속 도입되었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원형이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또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적 특징인 보편주의(universalism)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현물급여(in-kind benefits)에 큰 비중을 둔 급여지급방식 등이 상당 정도 뮈르달 부부의 사상에 지적 뿌리를 두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접

1) 국내 연구 중 스웨덴의 인구문제 논쟁과 이 논쟁에서 뮈르달 부부가 수행한 역할을 간략히 소개한 연구로는 신광영(2016)이 있다.

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관에 대한 이해는 한국 사회의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 철학적 기초다. 이들의 가족정책 구상은 임시방편으로 급조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탄탄한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가진 것이었다. 이들의 가족정책 구상과 정당화 논변은 현대 경제학 용어로 ‘소비자 무지(comsumer ignorance)’,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인적 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등의 논리에 의존한 것이었고, 철학적으로는 계몽주의 이래 서구 지식인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이성주의(rationalism)에²⁾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다. 본 연구는 뮌르달 부부의 주저인 『인구문제에서의 위기』와 1930년대에 가족정책 및 나아가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군나르 뮌르달이 집필한 논문과 저서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밝혀내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스웨덴에서 인구문제 논쟁이 발달된 배경과 초기 논쟁 지형을 개관할 것이다. 3절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뮌르달 부부의 진단과 처방의 핵심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4절에서는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5절에서는 뮌르달 부부의 철학적 입장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소개하고 평가할 것이다. 6절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할 것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관 및 사회정책관을 소개하고 분석, 평가하기 위해 분석할 핵심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2) 영어 ‘rationalism’은 통상 ‘합리주의’ 또는 ‘합리론’으로 번역되며 철학용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경험주의’ 또는 ‘경험론(empiricism)’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참된 지식의 궁극적 근거는 경험이 아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보유한 이성적 사유능력이라는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이성주의’란 용어는 ‘경험주의’에 대비되는 인식론 차원의 용어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대한 높은 신뢰에 기초하여, 이성적 활동의 정수인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칭한다.

Alva & Gunnar Myrdal. 1934. *Kris i Befolkningsfrågan* (인구문제에서의 위기), Stockholm: Bonniers.

Gunnar Myrdal. 1932. "Socialpolitikens delemma I" (사회정책의 딜레마 I), *Spektrum* No. 3.

Gunnar Myrdal. 1932. "Socialpolitikens delemma II" (사회정책의 딜레마 II), *Spektrum* No. 4.

Gunnar Myrdal. 1936. *Vad gäller striden i befolkningsfrågan?* (인구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Stockholm: Frihets förlag.

Gunnar Myrdal. 1938. "Kontanta eller i natura i socialpolitiken" (사회정책에서 현금이나 현물이나) *Nationalekonomisk tidskrift* 76.³⁾

2. 인구문제 논쟁의 배경 및 초기 논쟁 지형

인구문제 논쟁 발단의 배경은 출산율 저하였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산율이 1881-90년 기간에 29.1이던 것이 1901-05년에는 21.2로, 1926-30년에는 15.9로 떨어졌고 1933년엔 13.8을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최저수준이었다(Carlson, 1990: 2).

출산율 저하를 가장 심각하게 우려한 집단은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정당 중에서는 우익당(höger)이었다.⁴⁾ 보수주의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저출산 문

3) 군나르 뮈르달과 알바 뮈르달은 인구문제에 관한 연구를 처음부터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사회정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들에서 같은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전공분야가 서로 달라서 각자 전문성을 가진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예컨대 『인구문제에서의 위기』 집필에서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 소득, 주거 등에 대한 통계 분석이나 인구문제와 관련된 경제이론들에 대한 소개, 경제정책 대안 부분을 담당했고 알바 뮈르달은 사회정책 대안을 주로 담당했다고 한다(Carlson, 1990: 69). 또 이 논문에서 분석할 텍스트의 하나인 군나르 뮈르달의 1938년 논문 "Kontanta eller i natura i socialpolitiken"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알바 뮈르달이 과거에 발표한 글과 미발간 원고를 활용한 것이었다(Myrdal, Gunnar, 1938: 6). 따라서 이 논문에서 다룬 텍스트들 중 군나르 뮈르달이 단독으로 집필한 저술들의 내용도 뮈르달 부부가 공유한 입장이라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제를 우려해왔다. 이들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스웨덴 민족이 소멸하게 되는 ‘종족의 자살’이 초래되리라 우려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게 되면, 문명 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이주민이 쇄도하여 스웨덴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사회 불안이 초래되리라 우려했다(Myrdal, Alva & Gunnar, 1934: 9).

보수주의자들은 출산을 저하의 핵심 요인이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타락이라 생각했다. 근대화에 따라 전통적 성(性) 윤리와 가족관이 파괴되고 사회구성원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면서 쾌락은 추구하되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확산된 것이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피임기법이 도입된 것이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므로 피임용구의 매매나 피임법 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1910년과 1911년에 의회에서 피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 독신자에 대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Carlson, 1990: 16). 또 1931년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감면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인구문제 논쟁의 한 축을 이루는 지적 조류는 우생학주의였고 보수주의자들의 상당수는 우생학주의자이기도 했다. 우생학주의자들은 백인 우월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스웨덴인의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저열한 유전적 자질을 가진 이주민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유전적 퇴화가 진행되리라 우려했다. 이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처방도 많이 제시했는데, 예컨대 생물학자 보리(Folke Borg)는 스웨덴의 유전적 보고(寶庫)인 농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 감면과 주거비 지원, 취업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기업에서 해고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Ibid., 20).

반면에 사민주의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노동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4) 우익당은 현재 스웨덴의 제2정당이자 우파정당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보수당’의 전신이다. 보수당의 스웨덴어 명칭은 Moderata samlingspartiet로 직역하면 ‘온건주의자 집결당’이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통상 이념적 성격에 따라 ‘the Conservative Party’로 번역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신말더스주의(neo-Malthusianism)로부터 영향 받아 출산율 저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빈곤과 실업의 핵심 원인이 높은 출산율 이므로 만혼(晩婚), 피임 등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말더스주의 사상은 20세기 초에 스웨덴에 유입되어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스웨덴의 대표적 경제학자이자 열정적 사회개혁가였던 빅셀(Knut Wicksell)을 필두로 하는 신말더스주의자들은 피임방지법의 폐지와 낙태의 부분적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Myrdal, Alva & Gunnar, 1934: 26-49; Carlson, 1990: 11-15).

신말더스주의는 사민당의 지도적 이론가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1920년대에 활발한 저술활동을 통해 후배 사민주의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던 청년 이론가 칼레비(Nils Karleby)도 신말더스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미국과 호주의 이민규제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과잉인구의 배출구가 막혀 스웨덴을 포함하여 유럽의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Karleby, 1926: 262-272). 또한 사민당의 최고 이데올로그이자 1932-49년에 재무부 장관직을 맡았던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도 신말더스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Carlson, 1990: 15).

결국 뮈르달 부부가 인구문제 논쟁에 개입하기 전에는 보수주의자들이 출산율 저하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반면에, 사민주의자들을 위시한 진보주의자들은 신말더스주의적 사고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방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3. 뮈르달 부부의 저출산 문제 진단과 처방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에서의 위기』에서 인구통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출산율의 최근 추세가 장기 지속될 경우 두 세대 후에는 인구 규모가 당시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네 세대 후에는 1/4 수준으로 감소하리라는 것이다(Myrdal, Alva & Gunnar, 1934: 9). 그리고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동전의 양면은 인구 고령화

인데, 저출산·고령화가 향후 스웨덴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한다. 첫째, 고령화는 노인부양 비용의 증가를 낳는데 인간의 본성상 자녀와는 달리 부모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이 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인부양을 자녀의 자발적 헌신에만 맡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고령화는 사회분위기 전반을 노쇠하게 만들고 재산과 권력이 노인층에 집중되게 만들기 쉽다는 것이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노동인력을 대량 수입하게 되면 스웨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야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미 스웨덴의 노동계급은 이주민 유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Ibid., 103-106).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우려는 정당한 근거를 가진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의 무관심은 비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는 보수주의자들의 처방을 강하게 비판한다. 피임기법 보급 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상류층과 중산층이 먼저 피임기법을 활용해왔다는 점은 도외시하고 서민층이 피임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적극 막으려는 위선을 보인다는 것이다(Ibid., 41).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스웨덴 민족의 존속을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정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은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출산 문제를 주로 개인의 도덕 차원의 문제로 몰고 감으로써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개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Myrdal, Gunnar, 1936: 6). 즉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뮈르달 부부의 비판은 우생학주의자들에게도 향해진다. 우생학주의자들은 민족 간에, 사회계층 간에 유전적 자질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유전적 자질이 우수한 순수 스웨덴인과 중산층 이상의 사회계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족이나 사회계층 등 상이한 집단 간에 평균적 유전적 자질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각 집단 내부의 개인 간 차이라는 것이다(Myrdal, Alva & Gunnar, 1934: 67-68). 그리고 우생학주의의 대표 사례인 독일 나치즘은 사이비과학에 입각해 있으며, 독일에서 근래에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가 쇠퇴한 것이 나치즘 발흥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

한다(Ibid., 78).

이렇게 우생학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도 뫼르달 부부는 우생학주의자들의 주장의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즉 유전적 결함이 있는 개인들의 출산은 가능한 한 억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통적인 우생학적 이유로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적 이유로 유전적 결함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교육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이유로 유전적 결함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사회에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적 결함을 가진 개인들에 대해서는 계몽을 통해 출산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고,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려운 유전적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강제불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Ibid., 217-223).

뫼르달 부부는 신멜더스주의자들도 비판한다. 신멜더스주의자들은 피임 기법의 보급에 기여하고 합당한 근거를 가진 낙태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출산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제 신멜더스주의자들은 그들의 과제를 이미 거의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상태에 있다. 출산율이 극히 낮은 현재 상황에서도 출산율 저하를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Ibid., 55).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신멜더스주의로부터 영향 받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해왔다는 것이다(Ibid., 26).

뫼르달 부부는 이렇게 인구문제와 관련된 기존 핵심 입장들을 모두 비판하고 나서 인구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첫째, 저출산을 포함하여 인구문제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다(Ibid., 287).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기술발전과 경제발전 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그중에서도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 또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의식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과 개인은 주변 사회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으며 가족은 소비단위일 뿐 아니라 완결성을 가진 생산단위이기도 했다. 통념과는 달리 전

통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이 가족 단위의 생산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남성 가장이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고 여성은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형태로 성별 분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가부장주의의 강화를 낳았고 아동은 핵가족 내에 유폐되어 주변 사회와의 관계가 차단되었다. 아동의 성장환경, 교육환경이 매우 악화된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병행하여 발전하는 도시화는 자녀 양육비의 상승을 낳아 아이를 많이 낳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산업화는 이렇게 핵가족화, 개인주의화를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체라는 큰 단위에서 생산의 집단적,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또 생산에서 개인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화한다는 모순적 효과를 낳는다. 자유주의 이념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등의 사회적 배경에 뿌리를 둔 이념인데, 산업화의 모순적 효과로 인해 자유주의 이념과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은 대단히 불안정하고 긴장에 찬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이념은 이런 과도기적 역사발전단계에서 출현한 단명하는 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주의적, 집단주의적 생활양식과 사회이념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념인 것이다. 이제 전통사회의 대가족이 수행하던 역할을 이제는 ‘더 큰 국민가계(de större folkhushället)’, 즉 사회 전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317-325; 112-116).

둘째, 최근의 스웨덴의 출산율 저하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뮌르달 부부는 소득, 주거조건, 실업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출산율 저하가 주거비 상승 등 주거조건 악화나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빈곤 및 경제적 불안정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논증한다. 피임기법의 확산은 주거조건 악화 등 경제적 조건 악화에 대한 개인들의 합리적 대응이었다는 것이다(Ibid., 118-172). 따라서 문제 해결은 스웨덴 국민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진단에 입각하여 뮌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출한다. 정책대안들을 관통하는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제, 출산과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사안으로 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의 큰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가 필요한데, 보수주의자들이 강조해왔듯이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정으로부터 다자녀 가정으로의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즉 동일 소득집단 내부의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이 기피하는 재분배, 즉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의 재분배, 즉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도 필요하다(Myrdal, Gunnar, 1936: 24). 둘째, 기혼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 운영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셋째,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설계,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프로그램들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넷째, 보수주의자들은 출산율 제고, 즉 ‘인구의 양’ 증대에 주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구의 질’ 또는 ‘국민의 질(folkets kvalitet)’ 향상이다. 즉 국민의 평균적 건강수준, 교육수준, 노동능력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급속한 기술발전은 국민의 노동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구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질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Myrdal, Alva & Gunnar, 1934: 205-212). 그러나 인구의 양 증대와 인구의 질 향상 사이에 경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정책들은 동시에 인구의 양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성장하는 세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더 넓고 질 좋은 주택, 개선된 식사, 건강보호, 양육과 교육 등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촉진하게 마련이다(Myrdal, Gunnar, 1936: 29). 다섯째, 지원방식과 관련해선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 중심의 지원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뮈르달 부부가 현물지원을 선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여섯째,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자산조사(means-test)에 기초한 선별적 정책보다는 필요(behov; needs)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 보편적 정책이 바람직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정책은 복지수혜자를 업신여기는 사회 풍조를 낳기 쉽기 때문에 사회심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Myrdal, Alva & Gunnar, 1934: 202). 현대 사회복지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호나 학교 급식, 유치원 교육 등은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아동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Ibid., 203). 그리고 선별적 정책은 주된 납세자인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저항을 낳을 수 있다는 정치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내면서 복지혜택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을 확대해가려면 재원 부담을 지는 집단의 이해관계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yrdal, Gunnar, 1936: 88).

일곱째, 문제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사후적, 대중적 사회정책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사회정책(proflyktisk socialpolitik; preventive social policy)’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발전시켜가야 한다. 여덟째, 사회정책의 큰 부분, 특히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인간에 대한 생산적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 아홉째, 저출산의 원인이 스웨덴 사회 전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결책도 종합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스웨덴 사회 전체, 특히 경제구조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Ibid., 28).5)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뮈르달 부부가 제안한 구체적 정책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6) 첫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감면과 독신자에 대한 특별세 부과를 제안했는데,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해온 것을 수용한 것이다. 둘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

5) 영어문헌 중에서는 Tilton(1990: 161-165)이 뮈르달 부부의 사회정책관의 특성을 정리해놓았다. 그는 뮈르달 부부의 사회정책관의 특성을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1) 생산의 사회화에 대비되는 소비의 사회화 노선, 2) 공적 계획의 중요성 강조, 3) 현금지원 노선, 4) 예방적 사회정책, 5) 인적자본에 대한 생산적 투자로서의 사회정책.

6) 저출산 문제에 대한 뮈르달 부부의 처방은 대단히 종합적이어서 통상 사회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으로 간주되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상 사회정책 영역으로 간주되는 처방만을 정리했다.

하거나 기업이 노동자의 가구원 수를 반영하여 ‘가족임금(familjelön; family wages)’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셋째, 빈곤가정 자녀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취학 전 아동을 가진 가정에는 식료품비를 지원해야 한다. 무상급식의 식자재로는 과잉 공급된 스웨덴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열악한 주거조건이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이므로 주거기준을 높여야 한다. 딸과 아들을 가진 가정의 경우 최소한 주방, 부모 침실, 아들 침실, 딸 침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민간 주택 공급업자들은 집 주인이 다자녀 가정에게 집을 임대해줄기를 싫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이 적은 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의 큰 부분을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 특히 알바 뮌르달은 이상적인 공동주택(collective housing) 설계에 관심이 많았다(Carlson, 1990: 60-61).

다섯째, 의료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아동에게는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과 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종합병원 중심의 병원제도 설계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병원과 의사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행위별 수가제를 지양해야 하며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종합적, 상호보완적 운영을 위해 의료행정의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무료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또 부모의 특성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곱째,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학문적 재능과 의욕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고, 의무교육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실업학교를 확대하여 교육과 직업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경쟁심보다는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우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여덟째, 혼외 출산 자녀에게도 통상적 가정의 자녀와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임을 권장해야 하고, 합리적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불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열째, 피임용구 매매와 피임기법 교육을 금지하는 피임방지법을 폐지해야 하고, 합당한 근거를 가진 낙태는 사회적 통제 하에 합법화해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필요하지만 부모가 원치 않는 자녀를 억지로 출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Myrdal, Alva & Gunnar, 1934: 217-285; Carlson, 1990: 87-95).

4.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4.1 이론적 기초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경제이론적 기초는 주로 현물지원 중심의 지원방식을 정당화하는 논리에서 발견된다. 군나르 뮈르달은 1938년의 논문 “사회정책에서 현금이나 현물이나(Kontanta eller i natura i socialpolitiken)”에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근거를 여럿 제시한다. 현금지원을 선호하는 논자들은 현금지원이 복지수혜자의 소비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뮈르달은 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첫째, 빈곤층의 소비선택의 자유는 실제로는 그리 자유롭지 않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대규모 광고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선택이 생산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통해 거꾸로 소비자들의 소비가 생산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선택이 광고에 의존하여 형성되거나 왜곡된다는, 미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의 ‘의존효과(the dependence effect)’ 이론을 선취한 것이다(Myrdal, Gunnar, 1938: 84).⁷⁾

7) 갤브레이스의 ‘의존효과’ 개념은 1952년 저서 *The Affluent Society* 에 나

특히 아동지원정책의 경우엔 현금을 지원하면 부모가 이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부모의 ‘자유로운 소비선택’이 아동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자녀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수당정책이 부모의 출산동기를 높이는 것은 지급받은 현금을 부모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출산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수당정책의 출산촉진효과는 유전적 자질이나 성장환경의 측면에서 가장 부적절한 부모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85-86).

반면에 현물지원정책은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 이는 주로 대규모 공급에 따른 단위당 생산비 감소 효과에 기인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의 경우 개인들에게 의료비를 현금으로 소액 지원해주는 것보다 대형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지출액 대비 개인당 의료서비스 소비량을 늘려준다. 학교의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주거정책의 경우에도 국가나 콤문⁸⁾ 직접 주택공급을 조직할 경우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공급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Ibid., 82). 이런 논리는 현대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해당된다.

둘째, 현물지원을 통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학교의 무상급식의 식재료로, 과일 공급되어 판로를 찾지 못하는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면 아동뿐 아니라 농업과 농민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다자녀 가정을 위해 공공부문이 주택건설을 직접 조직할 경우, 주로 불황국면에 건설을 함으로써 경기회복 효과를 볼 수 있다(Ibid., 83-84). 셋째, 현물지원정책은 정책목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정책과는 달리 지출된 비용이 엉뚱한 데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넷째, 무상급식정책이나 공공주택 건설정책을 통해 식사나 주거의 바람직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이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Ibid., 85).

온다.

8) ‘콤문(kommun)’은 한국의 군(郡)에 해당되는 말단 지방자치단체다.

뮌르달 부부의 현물지원 선호는 현대 경제학 용어로 ‘소비자 무지(consumer ignorance)’ 문제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부모가 설령 자녀에 대해 애정과 책임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식이 부족하고 좋지 않은 생활습관에 젖어 있을 경우엔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소비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가정들에서도 자녀가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가 기본적인 영양학적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Myrdal, Alva & Gunnar, 1934: 164).

한편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양육 부담의 사회적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뮌르달 부부의 논리는 현대 경제학 용어로 ‘외부성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를 연상케 한다.⁹⁾ 뮌르달 부부는 출산을 제고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생각한다면 양육 부담을 출산 가정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Ibid., 189). 이를 ‘외부성’ 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하자면, 인구가 부족한 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제3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출산행위에 따르는 자녀 양육부담 전체를 출산 가정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 출산동기가 약화될 것이다. 출산을 많이 하는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정책은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막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예방적 사회정책에 대한 뮌르달 부부의 정당화 논리의 한 갈래는

9)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그의 거래상대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지칭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이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다. 그런데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경제주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자원이 공급되거나 소비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도입하면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유인구조 변화를 통해 외부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 한다.

현대 경제학 이론인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선취하고 있다. 군나르 뮈르달은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사회정책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성격만을 띤 사회정책과는 달리 성장기에 있는 세대 및 미래 인구의 건강과 노동능력을 증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인간자본(personliga kapitalet; the personal capital)’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⁰⁾ 그리고 이런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못지 않게 수익성 있는 투자라는 것이다. 과거에 사회정책은 주로 온정주의적 동기나 정의(正義) 차원의 동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추진되었는데, 이제 예방적 사회정책의 도입을 통해 사회정책을 경제적, 생산적 관점에서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Myrdal, Gunnar, 1938: 70-71).

그런데 이상의 경제학적 논리들을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식은 결국 효율성 증대라 할 수 있다. 사회정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목표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하나의 정책을 통해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하는 세대의 노동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사회의 번영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사고의 발로라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뒤에서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철학적 기초를 밝히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한편 사회제도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데서는 기술결정론적, 경제결정론적 사고가 강하게 확인된다. 가족제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제도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끄는 것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직업구조의 변화,

10) 인적자본이론은 1950년대 이후 발전했으며 대표적 이론가로는 베커(Gary Becker), 슈츠(Theodore Shultz), 민서(Jacob Mincer)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인적자본이론은 노동경제학에서 확고하게 정착된 주류이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Arthur Pigou)로서 1928년에 발간한 저서 *A Study in Public Finance* 에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30년 정도 경제학계에서 이 용어가 묻혀 있다가 195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다. 군나르 뮈르달이 ‘인간자본(personliga kapitalet)’이란 용어를 피구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부터 차용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뮈르달이 직업적 경제학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구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경제적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회제도의 변화를 야기한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라 도덕도 변화한다. “도덕은 본질적으로 제도의 함수이고 그 역은 아니다. 그리고 제도는 다시 주로 총체적 사회발전의 함수다. 그리고 총체적 사회발전은 최종적으로 기술에 의해 추동된다”(Myrdal, Alva & Gunnar, 1934: 288). 따라서 과거의 사회제도에 기초하여 형성된 도덕관에 입각하여 현재의 상태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타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보수주의자들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책도 기술발전에 의해 변화해가는 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인간유형을 양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첫째로 사회생활이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최선의 인간유형은 개인적으로는 조화롭고 사회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유형이다”(Ibid., 262). 그런데 고도의 분업에 기초하여 생산에서 개인 간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유형은 개인적 자립성과 집단적 협력능력을 겸비한 인간유형이다. 따라서 경쟁만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기존 교육은 사적 자본주의적(privat kapitalistisk) 시대의 산물인데, 사적 자본주의는 이제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말에 임박해 있다. 이제 교육정책은 개인적 주도성(Initiativ; initiative)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겸비한 “개인적으로 강한 집단주의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Ibid., 263).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사회제도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 이념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며, 기술발전 및 경제발전에 의해 변화해가는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해가지 못한 데 기인한다. 자유주의는 이제 보수적 이념으로 전락했다. “보수주의는 이제 개인주의적이다. 보수주의가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는 해체되고 있는 사회다. 이와 관련하여 급진주의는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이념이 되었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적으로 되고, 급진주의는 사회(주의)적(social)으로 된다”(Ibid., 321).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사회발전의 객관적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는 과학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

다.¹¹⁾

4.2 철학적 기초

이번에는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입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철학적 입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할 것인데, 그 하나는 가치 지향 또는 이념적 지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접근법 또는 방법론이다. 뮈르달 부부가 자신들의 철학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인구문제 논쟁 기간에 집필된 여러 저술들에서 그들의 이념적 지향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다.

먼저 이념적 지향과 관련해서 페미니즘, 사회주의, 연성(mild) 민족주의, 공리주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뮈르달 부부, 특히 알바 뮈르달은 통상 스웨덴에서 사회정책과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결합시킨 최초의 이론가로 평가된다. 전통적 성 역할 구분 속에서 주부로서의 역할만 부여받던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 특히 취업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의 핵심적 요소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등 여성의 사적 가사노동 영역으로 간주되던 것들을 사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11) 사회발전에 관한 이러한 설명방식은 마르크스(Karl Marx)의 역사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의 논리와 흡사하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궁극적 동인은 생산력의 발전, 즉 생산기술의 발전이다. 특정 생산력 발전수준에 조응하여 생산관계, 즉 생산에서 사람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 생산양식인데, 생산양식의 성격에 의해 법률, 정치, 그리고 도덕을 포함한 사회적 의식형태 등 사회적 상부구조가 결정된다. 사회혁명은 발전해가는 생산력과, 이에 조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을 유지하는 생산관계 및 이를 지지해주는 상부구조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뮈르달 부부는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이 없었고, 군나르 뮈르달은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 역사해석이 사회정책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으며(Myrdal, Gunnar, 1932a: 6), 마르크스주의가 실천적으로 무능하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Myrdal, Gunnar, 1932b: 24).

뫼르달 부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이 제안했고 일부 사민주의자들도 동의했던 가족임금 도입에 반대했다. 즉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자녀수에 따라 임금수준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그 이유의 하나는 주로 남성 가장에게 지급되는 가족임금이 여성운동이 주장해온, 노동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었다(Myrdal, Gunnar, 1938: 75). 가족임금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간주된 것이다(Carlson, 1990: 195).

뫼르달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현대 여성상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교육받고 취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가정 운영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내는 여성이다. 그리고 현실의 많은 여성들이 가족 내에 유폐되어 극히 한정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가부장주의적 사회제도와 문화의 억압적 영향에도 기인하지만, 여성 스스로 이러한 성 역할에 만족하며 안주해온 데에도 크게 기인한다는 것이다. “산업화된 가정 내에서 주부들은 생산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했고 그 결과 그들의 ‘생활수준’은 남편이나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결 더 완전하게 산업화된 사회에서 전체 가족구조의 형태와 관련 있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생산적 삶(produktionsliv; productive life)에서의 기능을 박탈당한 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갇혀 종종 뚱뚱해지고 둔해지며 이기적으로 된다”(Myrdal, Alva & Gunnar, 1934: 163-164).

이런 상황에서 출산은 여성에게 사회적 핸디캡으로 간주되며(Hirdman, 1994: 81), 사회가 양육 책임의 큰 부분을 떠맡음으로써 여성의 핸디캡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뫼르달 부부의 페미니즘 프로젝트의 핵심은 종래에 남성에게 부과되던 사회적 규범(male norm)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Ibid., 87).

뫼르달 부부의 사회주의 지향성은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 전반에 걸쳐 뚜렷이 확인된다. 그들은 보육, 교육, 의료 등 필수서비스의 사회화가 필요함

을 촉구하고, 소득의 수평적 재분배뿐 아니라 수직적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보육 등 필수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무상급식 등 현물지원 중심으로 사회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이유, 즉 톨톤(Tim Tilton)의 표현을 빌자면 ‘소비의 사회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Tilton, 1990: 161-162). 첫째,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무상으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여러 모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현물지원 중심 사회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뮈르달 부부의 논변을 소개하며 이미 살펴본 바 있다. 둘째, 의사, 심리학자, 교사 등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부모보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개혁은 아마추어리즘을 전문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의미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 삶과 행복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Myrdal, Alva & Gunnar, 1934: 304-305). 이는 아동들의 생활조건을 균등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특히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의 신경과민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305).

한편 뮈르달 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득계층 간에 급진적인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달성되는 소득균등화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 핵심 가치라기보다는 다른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점이다. “사회정책은 사회에서 실질적 필요에 따라 소득을 분배한다는 목적을 위해 급진적 소득균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균등화라는 결과는 실제로는 부산물로서의 성격을 더 가진다”(Ibid., 203). 사회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회정책의 직접적 목적은 국민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하고 인도하는 것이다.¹²⁾ 즉 상업적 광고의 영향 하에서 소규모 가게 수준

12) 칼손(Sven O. Karlsson)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념사를 다룬 책에서 평등 문제에 대한 군나르 뮈르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등주의적 파토스는 그의 프로젝트에서 주된 동력이 아니었다”(Karlsson, 2001: 579). “뮈르달에게 있어서 사회정책이란 평등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처럼 그리고 실사구시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에서 실행되는 소위 ‘자유로운 소비 선택’이 인도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소비를 조직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주, 특히 아이들의 의식주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해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될 수 있다(Ibid., 203).

그리고 뮌르달 부부는 대부분의 사회정책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관리를 강하게 선호했는데 이는 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이한 기관들이 각기 개별 정책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 프로그램들 간에 합리적 조율이 잘 되지 않아 소규모 개혁들이 서로 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253-254). 중앙집권적, 통합적, 계획적 사회정책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뮌르달 부부의 사회정책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의 식이라 할 수 있다.

뮌르달 부부의 사고에서는 연성 민족주의적 요소도 발견된다. 이들의 민족주의는 물론 스웨덴인의 인종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강성, 인종주의적 민족주의는 아니다. 그러나 뮌르달 부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주민 수용에서 찾는 것에 반대한다. 이주민이 대량 유입되면 임금수준 저하를 낳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스웨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주민에 국경을 개방할 경우 주로 스웨덴보다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주민이 쇠도할 텐데 스웨덴의 상대적으로 발달된 사회정책이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리라 우려한다. 따라서 “사회정책 시스템 자체가 이민 차단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Ibid., 107). 다만 노르웨이와 덴마크 처럼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나라들로부터의 이주민은 환영할 수 있으며, 독재국가들에서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탄압받는 과학자나 예술가들을 수용하는 것은 스웨덴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Ibid., 109-110). 결국 스웨덴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이주민만을 소규모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뮌

과 관련된 것이었다...뮌르달은 평등이나 박애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개인 시민과 대비되는) 사회의 자유였다. 즉 예방적 사회정책과 계획적 경제운영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복지를 창출하는 자유였다. 만일 결과적으로 경제적 평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평등이 우선적 목적은 아니었다”(Ibid., 580).

르달 부부는 스웨덴 민족과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스웨덴의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¹³⁾ 뤼르달 부부의 사고의 이런 민족주의적 요소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과 공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뤼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이 나중에 보수주의자들로부터도 상당 정도 공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뤼르달 부부에게서 발견되는 여러 이념적, 철학적 요소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공리주의적 요소라 판단된다.¹⁵⁾ 그리고 이 점이 당대의 여타 지도적 스웨덴 사민주의자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뤼르달 부부가 그들의 가족정책관을 공리주의에 명시적으로 입각하여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 곳곳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그 창시자인 벤담(Jeremy Bentham)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명한 문구로 대표되어왔다. 경제학자 센(Amartya Sen)과 철학자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공리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사고요소로서 복지주의(welfarism),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그리고 합계 순위 매기기(sum

13) 칼손(Allan Carlson)은 민족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알바 뤼르달과 군나르 뤼르달 사이의 차이를 지적한다. 알바 뤼르달의 경우엔 자신의 여성주의적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나르 뤼르달에게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것이다(Carlson, 1990: 85).

14) 하트예(Ann-Katrin Hatje)는 저출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35년에 발족된 국가연구위원회인 ‘인구위원회(Befolkningskommissionen)’에서의 논의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Hatje 1974: 171-175). 국가연구위원회란 스웨덴의 독특한 제도로서 의회나 행정부의 발안으로 구성하는 공적인 연구위원회다. 국가연구위원회는 정부가 중요한 정책사안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정책사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여 정부가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연구위원회에는 통상 주요 정당 대표, 주요 이익단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가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는 ‘SOU(statens offentliga utredning; 국가의 공적 연구)’ 시리즈로 발간된다. 국가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은 정부가 입법안을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1935년에 발족된 인구위원회에 군나르 뤼르달은 정식 위원으로, 알바 뤼르달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군나르 뤼르달은 인구위원회에서의 논의 전체를 주도했다.

15) 기존 연구 중에서는 Hirdman(1994: 81)이 알바 뤼르달의 사고방식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있었음을 지적했다.

ranking)를 든다(Sen, Amartya & Bernard Williams, 1982: 2-4). 복지주의란 개인이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떤 상태의 바람직함 정도를 평가하는 궁극적 기준은 복지(welfare) 또는 효용(utility)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⁶⁾

결과주의란 개인이나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떤 행위나 정책, 제도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good)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행위 동기의 정당성이나 사회적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이 아니라 오직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가 판별기준이다. ‘복지주의적 결과주의(welfarist consequentialism)’란 결과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결과의 바람직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로서의 복지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리주의는 복지주의적 결과주의의 대표 사례다. 마지막으로 함께 순위 매기기란, 복수의 대안적 상태들에서 사회구성원 각각이 누리는 복지의 크기를 확인하고 모든 개인들의 복지 크기를 합산하면 각 상태에서 사회 전체 차원의 복지 총량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복지 총량이 큰 순서대로 대안적 상태들의 바람직함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신정완, 2014: 33-34).

뮌헨 부부의 사고에서 공리주의의 이 세 가지 사고요소를 모두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good life)’이란 물질적 안락을 누리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아를 실현하여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최대도로 누릴 수 있는 삶이다.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도가 편성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복지주의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복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쾌락(pleasure)을 많이 누리고 고통(pain)은 적게 경험하는 상태, 즉 ‘심리상태’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벤담은 이런 입장을 취했다. 둘째는 ‘선호만족(preference fulfillment)’으로 해석하는 입장인데, 개인들이 각자 선호하는 것이 잘 충족될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선호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선호만족으로 해석하든 심리상태로 해석하든 결국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선호만족 입

16) 공리주의자들의 어법에서 ‘복지’와 ‘효용’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개념들이다.

장에서는 어떤 개인이 선호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가지거나 소비하였느냐 여부만 따지면 되지만 심리상태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거나 소비한 후에 그 사람의 심리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Ibid., 216-218). 오늘날 지배적 경제학 조류인 신고전과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에서는 복지 또는 효용을 선호만족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복지에 대한 지배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복지를 개인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개선시켜주는 객관적 요소들의 목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등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목록(objective list)’을 구성할 수 있고, 이 목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33).

복지에 대한 뮌달 부부의 해석은 정확하게 세 번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뮌달 부부는 소비자의 ‘소비선택의 자유’를 그리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부적절한 양육환경이나 교육, 관습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업 광고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소비를 허용할 수 있는 현금지원은 가능한 한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 하에 정부가 필수재화나 필수서비스를 현물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필수재화나 서비스의 목록에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 양질의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하게 살고 잘 교육받아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좋은 삶인 것이고, 좋은 삶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소비선택의 자유의 내재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결과와 무관하게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갖는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¹⁷⁾ 중요한 것

17)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센(Amartya Sen)은 자유를 ‘복지 자유(well-being freedom)’와 ‘행위능력 자유(agency freedom)’로 구분한다. 복지 자유는 복지를 누릴 자유이고 행위능력 자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주동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자유다(Sen 1992: 57-58). 뮌달 부부는 소비자의 소비선택과 관련하여 행위능력 자유의 독자적,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

은 개인들이 실제로 복지를 누리느냐는 것이고 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개인들의 주관적 선호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공리주의의 두 번째 요소인 결과주의와 자연스레 연결된다. 개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선택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복지증진을 얼마나 많이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은 자연스레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로 연결된다. 온정적 간섭주의란 A라는 주체가 B라는 주체의 행복이나 성공을 위하여 B의 선호나 의지에 거슬러가며 B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B 대신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Ibid., 230). 복지수혜자의 선택의 자유를 최소화하며 전문가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 좋다는 뉘르달 부부의 사고방식은 온정적 간섭주의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복지수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복지수혜자들이 복지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참여민주주의적 사고를 발견할 수 없다. 과학적 지식과 복지수혜자에 대한 책임감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복지수혜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뉘르달 부부의 사고방식에는 ‘합계 순위 매기기’의 요소도 확인된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생산과 분배를 합리적으로 재조직하여 사회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구성원이 누리는 ‘객관적’ 복지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 암시된 바 있듯이, 인구문제는 사회정책에만 머물지 않는 요구를 제기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구문제는 분배와 소비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산의 조직과도 관련된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Myrdal, Gunnar, 1936:30). “계획적 경제운영(planhushällning)이란 바로 사람들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조치들을 가지고 충분히 깊게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적 사회정책이란 바로 사회정책의 계획적 경제운영 형태다”(Myrdal, Gunnar, 1932b: 30-31). “성장하는 세대의 거대한 경제조직상의 과제는... 최대한의 생산이 최대한의 소비의 기초가 되고 또 그 역도 성립하도록, 생산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samhällelig

지 않는 셈이다.

behovshusällning)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다”(Myrdal, Alva & Gunnar, 1934: 177).

이렇듯 뮈르달 부부에게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생산주의적 지향, 즉 생산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사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생산을 최대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장기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 차원에서 소비량을 극대화하여 사회구성원의 복지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과 소비를 극대화하려면 노인복지보다는 아동 복지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뮈르달 부부는 주거조건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보다 아동의 주거조건 개선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인들은 완료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현재의 그들 모습 그대로다. 이와 달리 아이들은 일정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이 방향은 가정환경에 의해 많이 결정된다. 노인들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 죽게 되지만 아이들은 미래 사회를 건설하게 된다. 따라서 주거문제는 일차적으로 생계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미래의 질 문제다”(Ibid., 236).

뮈르달 부부의 사회주의 지향성의 배후에 있는 것도 결국 공리주의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보육 등 필수서비스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것이나, 적극적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 그리고 사회정책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선호하는 것은 모두 근본적으로는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투입된 사회정책 예산 대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여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뮈르달 부부에게 평등은 중요한 가치였으나 그 자체 내재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수준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적, 파생적 가치였다. 그런 점에서 뮈르달 부부의 가치 지향에 있어 공리주의적 가치가 가장 심층적 가치였다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접근법과 관련해서는 뮈르달 부부에게서 강한 ‘이성주의(rationalism)’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뮈르달 부부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능력을 깊이 신뢰했고, 이성적 활동의 정수인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적 지식의 힘을 신봉했다. 그들은 『인구문제에

서의 위기』에서 스웨덴의 인구, 소득, 주거, 실업, 영양상태 등에 대한 통계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는 과학적 분석 없이 도덕주의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비판하며, 저출산의 객관적 원인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접근법은 인구문제 논쟁에서 뉘르달 부부의 입장이 지배적 입장으로 대두하게 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학적 접근법에 대한 뉘르달 부부의 신뢰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예컨대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였던 당대의 우생학적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우생학적 연구의 과학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었다. “특별히 바람직한 유전적 속성을 가진 개인들의 번식을 촉진하거나 최소한 이들의 번식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진 긍정적 우생학은 미래의 꿈으로 등장한다.... 개인 간의 차이들과 차이들의 성격이 유전적인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서 유전생물학적 연구는 이미 흥미롭고 실제로 의미 있는 기여들을 산출했고 앞으로 더 그러기를 기대할 만하다.” (Myrdal, Alva & Gunnar, 1934: 67).

그리고 교육정책에서는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등 진로지도에서 과학적 적성검사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Ibid., 279). 그리고 지금까지 스웨덴의 교육정책을 지배해온 자유주의적 교육관, 즉 ‘개인의 자유로운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관은 나이브한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은 사회의 요구다. 즉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의해 규정되는 분업구조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노동력의 질이 교육의 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방향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계획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학교의 목표설정은 분명히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개인의 발전에 대한 계획적 지도와 사회의 이익에 따른,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지식의 선택”(Ibid., 266).

그리고 군나르 뉘르달은 1932년에 발간한 논문들인 “사회정책의 딜레마 (Socialpolitikens dilemma I)”과 “Socialpolitikens dilemma II”에서 전문가들의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예방적 사회정책이야말로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요 이념들이 봉착한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어온 사회정책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타협물이었다. 즉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진보적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 개혁주의적 사회주의, 즉 사민주의 간의 잠정적 타협물이었다. 그런데 이 타협은 안정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원리적으로 평등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어서 정치적 자유 문제에서는 평등주의적 입장을 일관되게 추구해왔으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지와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신봉으로 인해 사회정책을 크게 확장시켜가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다. 사회정책의 급진적 확대는 개인의 자조(自助) 노력을 약화시키고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기존의 경제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회정책은 시혜적 사회정책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의 발전에 따라 자유주의는 점점 더 보수화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사민주의는 개혁의 부분적 성공으로 인해 점차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되어왔고, 지금까지 사민주의자들이 추진해온 사회정책은 자유주의자들의 사회정책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한편 급진적 사회주의의 대표격인 마르크스주의는 그 결정론적 역사관, 즉 노동자의 궁핍화와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성 등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회정책에 회의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더 급진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이념과 사회운동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정책의 이러한 담보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탈출구를,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예방적 사회정책에서 찾는다.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대개 특정 정치이념에 얽매어 있지 않으며 기존 사회의 전통과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들은 사실에 대한 지식에 입각하여 실사구시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발견하려 한다. 그리고 이런 사회공학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접근법은 대개 기존의 사회질서를 급진적으로 개조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예컨대 합리적 주거정책을 모색하는 건축가들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합리적 주거정책과 도시계획정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편견 없는 실사구시적 접근의 결과로 이런 입장에 도달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중적 사회정책의 한계를 넘어 사회문제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급진적 성격의 예방적 사회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기존의 사민주의자들보다도 더 급진적 정책노선을 취하게 된다.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는 사회정책이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는 결정론적, 숙명론적 입장으로 빠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과학적이고 실사구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념들보다도 더 급진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정책 이데올로기는 자기 안에 강하게 급진적이고 어느 정도는 혁명적인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지성주의적이고 냉정하게 이성주의적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기존 사회의 합리성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이념 장애물로부터 고도로 자유롭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순수히 일반적이고 비세속적인 이념 구성물로 경도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사구시적(saklig)이기 때문이다. 이 이데올로기의 낭만(romantik; romance)은 엔지니어의 낭만이다”(Myrdal, Gunnar, 1932b: 25). “새로운 사회정책은 예컨대 사회주의적 개혁주의보다 더 급진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적 혁명주의에 대한 열광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그것은 매우 기술 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 그것은 기술 지향적인 데다 늘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평등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출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재산균등화는 특정한 사회문제, 예컨대 빈곤계급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나온다”(Ibid., 28).

이토록 강한 이성주의적 입장은 사회정책의 설계와 운영에서 대중의 상식보다는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우선시하는 전문가주의로 귀결되며, 복지수혜자의 선호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온정적 간섭주의로 귀결

된다. 예컨대 뮈르달 부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학교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이유의 하나로 영양학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식단을 짤 수 있다는 점을 든다(Myrdal, Alva & Gunnar, 1934: 227). 그리고 아동의 양육도 부모보다는 전문적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동들에게 좋다고 주장한다. 자녀 양육에 관심과 재능이 없는 엄마들이 모성애와 전통적 가족형태에 묶여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 양육에 적성이 있는 여성들을 전문적 보육교사로 양성하여 아이를 키우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304). 그리고 그들은 예방적 사회정책에 반대하며 개인과 가정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성적 틀이 없는 자유는 자의(恣意)이며 그것도 위험한 종류의 자의다”(Ibid., 300).

결국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 배후에 있는 철학적 기초의 핵심은 공리주의와 이성주의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사회주의적 요소, 즉 강한 평등주의나 사회와 경제에 대한 계획적 운영에 대한 신봉은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이나 스웨덴 노동운동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와 이성주의가 결합하여 파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정책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지지된다. 현물지원방식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논리들에 스며들어 있는 온정적 간섭주의나 전문가의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전문가주의적 사고도 공리주의와 이성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개인들의 주관적 선호의 실현이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참여 등은 그리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결과로서의 복지 극대화가 훨씬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객관적’ 또는 ‘실질적’ 복지를 누리는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더 잘 안다는 것이다.

결국 뮈르달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란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계획적 경제운영에 따라 사회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상당히 평등한 조건에서 양육되어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 전체 차원의 생산 극대화에 기여하며, 필수재화의 소비에 있

어 그들의 주관적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 ‘필요’에 따라 소비하여 ‘객관적 복지’를 최대한 누리는 사회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인도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다, 전문가들에게 많은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과학적 지식을 보유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5. 뮌르달 부부의 사상에 대한 평가

앞 절에서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이론적, 철학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뮌르달 부부의 철학적 입장의 핵심은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복지 총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사회공학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강한 이성주의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뮌르달 부부의 이런 철학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스웨덴 내의 대표적 연구들은 대체로 뮌르달 부부의 입장에 비판적이다. 특히 과학에 대한 과도한 신뢰에 기초하여 전문가들 주도로 사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스웨덴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사회학자인 히르드만(Yvonne Hirdman)은 뮌르달 부부에게서 강한 유토피아주의를 발견한다. 그녀에 따르면 사회주의 이념은 태생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유토피아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성적 원리에 입각하여 사회를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어온 것이다.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경우에도 이러한 유토피아적 경향이 뚜렷이 확인되는데, 그 ‘이념형(ideal type)’적 사례, 즉 전형적 사례가 뮌르달 부부라는 것이다(Hirdman, 2000: 98).¹⁸⁾ 특히 뮌르달 부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가정과 같이 미시적이고 사적인 세계까지도 합리적으로 개조하려 했으며 스웨덴 사회를 자신들의 사회공학적 기획의 실험장으로 간주했다(Ibid., 121).

18) Yvonne Hirdman, *Att lägga livet till rätta*, 2ND edition, Carlssons, 2000. 이 책의 초판은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은 출판사에서 1989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뮌르달 부부의 입장에서, 국가가 가정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두 가지였다는 것이다. 하나는 국가의 ‘과학적 역량’이다. 국가는 개인보다 과학적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과학적 지식에 입각한 개입은 도덕적 권리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설령 개인들이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는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고 개인들의 삶을 개조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주체로서의 국가의 권리다. 국가가 사회정책을 통해 개인들을 지원한다면 개인들은 그 대가로 국가의 지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Ibid., 126).

히르드만은 뮌르달 부부로 대표되는, 스웨덴 사민주의운동의 유토피아주의와 사회공학적 합리주의로 인해 개인들의 사적 삶이 국가의 행정체계 속으로 깊이 포섭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논의를 차용하여 국가라는 체계(system)에 의한 시민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학적 합리성 추구의 극단적 사례가 강제불임정책이라는 것이다(Ibid., 229).¹⁹⁾

스웨덴의 저명한 정치학자 로드슈타인은 이러한 히르드만의 주장을 비판한다.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과 그 배후에 있는 철학적 입장을 스웨덴 사민당의 입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은 결코 전면적으로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만 수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뮌르달 부부의 노선보다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사회부 장관이었던 뮐러(Gustav Möller)의 노선 위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뮐러는 인구문제 논쟁에 대한 뮌르달 부부의 개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했지만 뮌르달 부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인구문제

19) 실제로 스웨덴에서 1935-75년 기간에 강제불임정책이 시행되었다. 2차대전 이후엔 불임시술이 필요한 근거로서 우생학적 근거는 약화되고 의학적, 사회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불임시술의 강제성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Tydén, 2002: 584). 스웨덴의 강제불임정책과 관련해서 Tydén (2002)과 미야모토 타로(2003) 참조.

논쟁을 진보적 사회개혁을 위한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뮈르달 부부의 기여를 인정했지만 뮈르달 부부처럼 과도한 사회공학적 합리주의로 경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뮈러는 뮈르달 부부와는 달리 대중의 건전한 상식을 신뢰하여 현물보다는 현금 중심의 지원방식을 선호했다. 둘째,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나 전문가들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복지행정이 관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 등 복지수혜자를 대변하는 대중운동조직들이 복지행정에 참여하거나 행정을 감독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즉 뮈러는 뮈르달 부부와는 달리 복지행정의 민주화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셋째, 뮈르달 부부는 복지수혜자의 정확한 타겟팅(targeting)을 위해 정책 영역에 따라 선별적 정책을 선호하기도 했으나 뮈러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보편주의 입장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뮈르달 부부의 노선이 아니라 뮈러의 노선이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사례가 1947년에 도입된 보편적 아동수당이라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가정에 부모의 경제적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 수에 따라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틀과 관련하여 현금지원을 선호한 뮈러의 노선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히르드만은 실제로 구현된 정책이 아니라 1930년대와 40년대의 가족정책 ‘담론’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마치 뮈르달 부부의 노선이 그대로 관철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Rothstein, 2002: 206-216). 그러나 어쨌든 로드슈타인도 뮈르달 부부의 과도한 사회공학적 합리주의와 권위주의적 국가개입주의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히르드만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역사학자 칼손(Sven O. Karlsson)은 뮈르달 부부의 권위주의적 사회공학적 의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뮈르달 부부의 입장을 당시 사민당 정부의 재무부장관이자 사민당의 최고 이데올로그였던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의

20) 뮈르달 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이는 현물지원을 선호하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출산을 많이 하리라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Hatje, 1974: 203).

입장과 대비시킨다. 비그포르스는 뮌달 부부와는 달리 진정한 민주주의자였으며,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뮌달 부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다. 뮌달 부부는 개인을 사회의 세포처럼 간주하고 사회발전 방향에 개인들이 적응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한 반면에, 비그포르스는 뮌달 부부의 과도한 기술관료적(*teknokratisk; technocratic*) 합리성 추구에 거부감을 가졌으며, 개인의 불가침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을 사회의 으뜸가는 책무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웰러와 마찬가지로 현물보다는 현금 중심의 지원정책을 선호했다는 것이다(Karlsson, 2001: 587-606).

역사학자 닐손(Göran B. Nilsson)은 개인의 자유 문제에 대한 군나르 뮌달의 인식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뮌달은 인구문제 논쟁에서 자신의 예방적 사회정책을 비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비용 문제 때문에 저항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의 우려의 핵심은 기술공학적 합리성의 명분하에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다보면, 기술 또는 기술체계가 개인들의 삶에 봉사하는 수단으로부터 개인들을 소외시키는 자기목적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고, 이 문제는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Nilsson, 1994: 177). 또한 뮌달은 미래 세대의 복지를 중시하면서도 사회 운영의 권한을 온통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미래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관리할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다(Ibid., 179).

필자도 이러한 비판들에 대부분 동의한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복지 총량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개인들이 각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개별적 존재이며 사회 전체의 복지 총량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와 무관하게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무시하기 쉽다. 또한 이성과 과학의 힘에 대한 순진할 정도의 신봉도 비판받을 만하다. 과학적 지식이 항상 불완전한 것이며 또 각기 스스로 진리임을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과연 올바른 과학적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과학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담지자인 전문가들은 과연 모든 이해관계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상식적 질문도 던질 수 있다. 또한 뮌달 부부가 개인의 선택의 자유나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

치를 거의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하이에크(Friedrich Hayek)의 용어를 빌리면, 뮌헨 부부의 사고방식은 ‘구성주의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성에 입각하여 인간과 사회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이성의 인도에 따라 사회를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계몽주의 이래로 서구 지식인들을 지배해온 사고방식이자 지식인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치명적 자만(fatal conceit)’의 소산이다(Hayek, 1988).

그러나 뮌헨 부부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현재적 관점에서의 비판이어서 뮌헨 부부가 인구문제 논쟁에 개입했던 당시의 스웨덴 사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비판일 수 있다. 히르드만과 로드슈타인 사이에 형성된 논쟁구도도 스웨덴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이후의 상황, 따라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장점뿐 아니라 문제점도 드러난 상황에서 형성된 논쟁구도다.

뮌헨 부부가 인구문제 논쟁에 개입했던 상황은 이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영양상태나 주거조건 등 당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서민대중의 생활수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으며, 서민들의 소비행태는 ‘소비자 무지’를 크게 우려할 수 있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뮌헨 부부는 스웨덴 주거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가구들의 경우에도 사치품은 상당히 구매하면서도 주거조건을 개선하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심각한 문제라 생각했다. 현물지원에 대한 뮌헨 부부의 강한 선호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Carlson, 1990: 57).

또한 당시 스웨덴 국민의 교육수준은 현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았으며 대다수 국민이 전통적 성 역할 구분 등 인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 등 대중운동과의 접촉 경험이 없었던 지식인인 뮌헨 부부가 서민대중의 건전한 상식을 신뢰하기보다는 계몽된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기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국가에 의한 시민들의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서민대중의 생활세계의 곤경에 대한 국가의 방치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가까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뮌르달 부부가 인구문제 논쟁에 개입할 당시의 논쟁 구도나 스웨덴 사회의 이념 지형은 뮌르달 부부의 공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접근법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상황인 측면도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여 정책처방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집단은 보수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의 처방은 대체로 퇴행적인 것이었다. 사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신멜테르스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인구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 국면인 1932년에 집권한 사민당은 1933년부터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정책과²¹⁾ 적극적 실업정책을 집행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개혁구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스웨덴의 사회정책은 아직은 전통적인 구빈법적 프로그램들이 지배적인 상태였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사회정책을 대규모로 확대해가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 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는 사민주의자들에 의해 실천노선으로서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나 적어도 담론 차원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나르 뮌르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는 결정론적 사고로 인해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정책의 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뮌르달 부부의 공리주의적, 이성주의적 논변은 전통적인 이념 대치구도로부터 상당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 실사구시적 스타일로 인해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뮌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과 이를 정당화하는 논변은 당시 사민당 정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이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에도 크게 기여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뮌르달 부부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담론에 의존하지 않고 실사구시를 강조함으로써 진영

21) 1930년대의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은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비그 포르스가 주도했는데, 군나르뮌르달은 케인스주의적 수요관리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논리를 넘어 그들의 진보적 사회개혁 구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도 1930년대 말부터는 진보적 방향의 사회정책 개혁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에서의 위기』가 가져온 효과라 할 수 있다(Hatje, 1974: 226, 236). 결국 인구문제 논쟁에서 사민주의 진영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뮈르달 부부의 공로라 할 수 있다.

둘째, 그들의 구체적인 가족정책 제안들과 연성 민족주의적 성향은 당시 사민당의 핵심 담론이었던 ‘국민의 가정(folkhemmet; the people’s home)’과²²⁾ 친화력이 매우 큰 것이어서 사민당 정부에 크게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우선 계급이 아니라 국민을 강조하는 ‘국민의 가정’ 담론은 뮈르달 부부의 연성 민족주의와 이미지 상으로 친화력이 컸다. 또한 좋은 사회를 좋은 가정에 비유한 국민의 가정 담론과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해가자는 뮈르달 부부의 입장은 이미지 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친화력이 매우 컸다. ‘국민의 가정’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내용을 뮈르달 부부가 채워준 것이라 할 수 있다(Ibid., 233). 군나르 뮈르달의 회고에 따르면, ‘국민의 가정’ 담론을 만든 장본인인, 당시 사민당 당수이자 정부 수상이었던 한손(Per Albin Hansson)은 펠러나 비그포르스와는 달리 초기부터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접근방식에 호의적이었다고 한다(Myrdal, Gunnar, 1982: 188). 그리고 당시 사민당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개혁 구상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를 뮈르달 부부가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줄 수 있었다.

셋째, 당시 스웨덴 사회에는 아직 생소한 이념이었던 페미니즘을 사회정

22) ‘국민의 가정’ 또는 ‘인민의 가정’이란 말은 1928년 당시 사민당 당수였던 한손(Per Albin Hansson)의 의회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이후 사민당의 이념 및 정책 노선을 압축해주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국민의 가정’이란 표현은 사민당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가 좋은 가정과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즉 좋은 가정 내에서는 차별과 편애가 없고 평등과 협력, 애정의 원리가 지배하는데 사민당이 지향하는 사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 사회를 좋은 가정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국민 내부를 구획하는 각종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가정’ 담론은 계급투쟁보다는 계급 간 협력과 국민통합을 우선시하는 국민주의적 요소, 점진적 사회개혁을 중시하는 온건한 개혁주의 노선, 연성 민족주의적 요소 등을 포함했다.

책 개혁 구상 속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로 용해시켰다.²³⁾ 양성 평등주의는 이후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특성으로 정착되어 갔다. 넷째, 그들의 가족정책 구상 및 나아가 전반적인 사회정책 구상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고 그들의 구상의 많은 부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점차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과도한 설계주의적 경향은 다행히도 뮌러 등에 의해 적절히 제어되었다.

뿐만 아니라 뮌르달 부부의 사회정책관에는 일반론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럿 있다. 첫째, 그들의 사회정책관은 토빈(James Tobin)의 ‘특정적 평등주의(specific egalitarianism)’와 연결된다.²⁴⁾ 사회정책 영역에서 특정적 평등주의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자의 구매력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동질적 품질로 제공되고 각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양은 각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특정적 평등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소비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사례가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다. 특정적 평등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하나는 교육과 의료와 같은 필수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오직 필요에 따라 분배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경쟁조건을 균등화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 간에 연대감이나 국민적 일체감이 형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정완, 2014: 269-273).

그런데 4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뮌르달 부부는 부모보다는 전문적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이유의 하나로 아이들의 생활조건을 균등화를 들었다. 부모의 특성과 무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아이들이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특정적 평등주의의 정당화 논리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성품 등이 아이들

23) 스웨덴 사회주의의 전통에서 페미니즘을 처음으로 강조한 인물로는 혁명적 무정부주의자였던 베르케그렌(Hinke Berggren; 1861-1936)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폭력적 봉기를 주장한 그의 과격함의 입장으로 인해 그의 페미니즘적 요소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24) ‘특정적 평등주의’란 용어를 만든 토빈은 미국의 대표적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로 198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specific egalitarianism’을 ‘구체적 평등주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또 ‘특정적 평등주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상품 평등주의(commodity egalitarianism)’가 있다.

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기회균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현물중심의 지원방식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의 무시와 같은 단점도 있지만,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현물중심 지원방식의 장점과 관련하여 뮌헨 부부가 언급하지 않은 것의 하나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비중이 큰 복지국가 모델의 제도적 안정성이다. 현물급여인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복지국가 모델의 대표사례가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다. 사회서비스는 많은 시설과 인력, 행정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확장하기도 어렵고 거꾸로 크게 축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나빠지거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더라도 급격한 축소나 해체가 어렵다. 즉 제도적 안정성이 높다(Ibid., 269).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각국에서 사회복지 축소의 흐름이 있었지만 북유럽국들이 상대적으로 기존 복지국가의 틀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를 이들 나라들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뮌헨 부부는 사회정책의 설계와 운영에서 개별 프로그램들 간의 보완성을 증시하는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했는데, 이는 오늘날 비교자본주의론이나 비교정치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흐름인 ‘자본주의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 theory)’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되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의 대표적 논자인 아마블(Bruno Amable)은 제도적 보완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어떤 영역에 있는 하나의 제도의 특정 형태가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제도의 존재, 작동, 또는 효율성을 강화할 경우 제도적 보완성이 있다.”(Amable, 2003: 60). 개별 제도들이 각기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제도들 간에 보완성이 없는 방식으로 전체 사회 시스템이 설계되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오늘날 사회과학계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뮌헨 부부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이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제도적 보완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6. 맺음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인구문제 논쟁은 이후 스웨덴 사회의 진보적 개혁의 물꼬를 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인구문제 논쟁의 주역은 뮌르달 부부였다. 이들은 저출산율에 걱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되,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종합적인 진보적 사회정책 개발을 통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들의 진단과 처방은 경제이론 차원에서는 오늘날의 경제학 용어로 ‘소비자 무지’,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이론’, ‘외부성의 내부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었으며, 이들의 가족정책관 배후에 있는 가치 지향 또는 이념적 입장으로는 페미니즘, 사회주의, 연성 민족주의, 공리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진단하는 접근법 측면에서는 강한 이성주의가 발견된다. 그리고 뮌르달 부부의 사상의 가장 심층에 있는 철학적 입장은 공리주의와 이성주의라 할 수 있다.

사회공학적 합리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했던 뮌르달 부부의 사고방식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도 여럿 있지만 당시 스웨덴 사회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주요 특성인 보편주의와 현물지원의 비중이 큰 지원방식은 상당 정도 뮌르달 부부의 지적 유산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뮌르달 부부의 사고방식에는 일반론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요소가 여럿 존재한다. 좋은 제도나 정책의 배후에는 훌륭한 사상가나 이론가가 있게 마련이라는 주장이 일반론적으로도 성립하는지 필자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예증할 수 있는 최선의 사례에 가까운 것이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뮌르달 부부의 관계라는 점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문헌》

- 미야모토 타로 저, 임성근 역. 2003.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 신광영. 2016. “사회민주주의 복지사상: 뫼르달 부부와 에스핑-앤더슨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7호.
- 신정완. 2014. 『복지국가의 철학』, 인간과복지.
- Amable, Bruno.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ppelqvist, Örjan & Stellan Andersson. 1998. *Gunnar Myrdal vägvisare* (길 안내자 군나르 뫼르달), Stockholm: Nordstedts.
- Barber, William. 2008. *Gunnar Myrdal: An Intellectual Biography*,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Carlson, Allan. 1990. *The Swedish Experiment in Family Policy: The Myrdals and the Interwar Population Crisis*, New Brunswick,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Galbraith, John Kenneth. 1952. *The Affluent Society*, Boston: Houghton Mifflin.
- Gustafsson, Bo. 1990. *Gunnar Myrdal: Liv och verk* (군나르 뫼르달: 생애와 저작), Uppsala Papers in Economic History, Research Report no. 25. Department of Economic History, Uppsala: Uppsala University.
- Hatje, Ann-Katrin. 1974. *Befolkningsfrågan och välfärden: Debatten om familjepolitik och nativitetöknning under 1930- och 1940-talen* (인구문제와 복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가족정책과 출산율 제고에 관한 논쟁), Stockholm: Allmänna Förlaget.
- Hayek, Friedrich.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dman, Yvonne. 1994. “Social Engineering and the Woman Question: Sweden in the Thirties”,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44, summer.

- Hirdman, Yvonne. 2000. *Att lägga livet till tirlätta: Studier i svensk folkemspolitik* (삶을 반듯하게 만들기: 스웨덴의 국민의 가정 정책에 관한 연구), 2nd edition, Stockholm: Carlssons.
- Karleby, Nils. 1926. *Socialismen inför verkligheten* (현실에 직면한 사회주의), Stockholm: Tidens förlag.
- Karlsson, Sten O. 2001. *Det intelligenta samhället: En omtolkning av socialdemokratiska idéhistoria* (지성적 사회: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사에 대한 재해석), Stockholm: Carlssons.
- Myrdal, Alva & Gunnar. 1934. *Kris i Befolkningsfrågan* (인구문제에서의 위기), Stockholm: Bonniers.
- Myrdal, Gunnar. 1932a. "Socialpolitikens delemma I" (사회정책의 딜레마 I), *Spektrum* No. 3.
- Myrdal, Gunnar. 1932b. "Socialpolitikens delemma II" (사회정책의 딜레마 II), *Spektrum* No. 4.
- Myrdal, Gunnar. 1936. *Vad gäller striden i befolkningsfrågan?* (인구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Stockholm: Frihets förlag.
- Myrdal, Gunnar. 1938. "Kontanta eller i natura i socialpolitiken" (사회정책에서 현금이나 현물이나), *Nationalekonomisk tidskrift* 76.
- Myrdal, Gunnar. 1982. *Hur styrs landet? I*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나? 제1권), Borås: Rabén & Sjögren.
- Nilson, Göran B. 1994. "Den sociala ingenjörskonstens problematik: En orättfärdig dissektion av den unge Gunnar Myrdal" (사회공학적 기예의 문제들: 청년 군나르 뮌르달의 정당하지 않은 분석), In Per Thullberg & Kjell Östberg red., *Den svenska modellen* (스웨덴 모델), Lund: Studentlitteratur.
- Rothstein, Bo. 2002. *Vad bör staten göra?: om välfärdsstatens moraliska och politiska logik.*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복지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논리), 2nd edition, Stockholm: SNS Förlag.
- Sen, Amarty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 & Bernard Williams. 1982.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lton, Tim. 1990. *The Political Theory of Swedish Social Democracy: Through the Welfare State to Socialism*, Oxford: Clarendon Press.
- Tydén, Mattis. 2002. *Från politik till praktik: De svenska steriliseringslagarna 1935-1975* (정책에서 실천으로: 1935-75년 기간에 스웨덴의 불임법들), 2nd edition, Stockholm: Acta Universitatis Stockholmiensis, Stockholm Universitet.

<Abstract>

The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Family Policy Ideas of Alva & Gunnar Myrdal in the Swedish Debate on Population Problem in 1930s

Shin, Jeongwan *

Sweden experienced continuously declining fertility rate in early 20th century, and this aroused the population debate. Those who worried most the low fertility rate were the conservatives, while the progressivists holding neo-Malthusian view did not. Alva & Gunnar Myrdal, the spouse with social democratic inclination, published the book *The Crisis in Population Problem* (Kris i befolkningsfrågan) in 1934 and thereby changed fundamentally the debate terrain. They acknowledged the seriousness of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contrary to the conservatives, however, they maintain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aise fertility rate and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 by progressive family policies. The core idea of their family policy proposals was that society should take the burden of children rearing costs and should support the married working women for holding down job and running household at the same time. Justifications of Alva & Gunnar Myrdal for their family policy ideas included economic logics which can be expressed as ‘economies of scale’, ‘consumer ignorance’, ‘human capital theory’, and ‘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 in modern economic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Alva & Gunnar Myrdal, in terms of their ideological

* School of Economics &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rientation or value orientation, were feminism, socialism, mild nationalism, and utilitarianism. In terms of the approach to social issues, very strong rationalism is found. Especially utilitarianism and rationalism were the hardcore of their philosophy. Even though their approach can be criticized in that they pursued too much the social engineering styled rationality, their contribution should be highly acknowledged if we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Swedish society at that time. Alva & Gunnar Myrdal intended to use the population debate as a good chance for trying progressive social reforms, and their intention was largely realized. Substantial parts of the Swedish welfare state model are debted to the intellectual legacy of Alva & Gunnar Myrdal.

Key Words: Alva & Gunnar Myrdal, debate on the population problem, family policies, utilitarianism, rationalism

성명: 신정완
소속: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E-mail: juans@knu.ac.kr

논문 접수일: 2017.5.10.

논문심사 완료일: 2017.5.30.

수정원고 접수일: 2017.6.17.

게재 확정일: 2017.6.18.